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은 3월 6일(금) 전국시도연구원장과 연구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3:30부터 유성리베라호텔 피어니홀(14층)에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정기총회는 전국 15개 전국시도연구원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2009년도 “광역경제권 운영방안에 대한 포럼” 개최 등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등을 확정과 동시에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광역경제권 운영방안에 대한 포럼”은 이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는 공동연구

사업이다. 위 포럼은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법체계 안에서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과 초광역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다층적 연구를 통해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광역경제권간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포럼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그리고 지역순회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포럼은 전국시도 연구원협의회의 최초의 공동연구포럼으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공론화 장으로 승화되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체계적·합리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정부에 개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방안 및 대응 전략 등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하였다. 한남대 정순오 교수의 주제발표 후 육동일 원장의 사회로 16개 지방출연연구원장 및 실무자가 토론에 참여해 각 시·도의 발전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각 시도의 핵심 이슈인 만큼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장이 되었다.

토론에서 정순오 한남대 교수는 “국가재정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성 사업은 향후 국가재정의 상황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고 민자 유치성 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에 따라 착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있어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에 대한 선도 사업 추진은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한데다 초광역권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프로젝트의 재정규모도



미지수이다. 또한 행정도시나 혁신도시에 대한 부담도 남아 있는 만큼 올해 연말이나 돼야 지역발전정책의 그랜드 플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실천계획을 구분해 발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지방도 지역경제상황을 고려시켜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과 실천 계획 위주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를 맡은 육동일 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각 지자체간에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공론화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지역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와 세미나를 마친 후 전국지도연구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원장 및 연구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을 시찰하였다. 이번 행사의 마지막으로 계획한 기관방문은 각 연구원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수질관리, 4대 강 살리기, 하천살리기 등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수법사례를 견학함으로써 연구수행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받은 후 방문단은 대청댐으로 이동하여 발전소와 물관리관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정기총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